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체회의서 법안 의결 국회 본회의 등만 남아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본회의의 상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앞서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에 상정된 특별법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과 유사하며, 이에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의 협조 등 3개 조항이 추가된 행정위 가결안이 반영되어 법사위 심의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도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며,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전북은 그간 노력해온 독자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호남에 예속되어 차별받는 사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가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의 시작 전 유상범 법사위 위원(국민의힘)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구체적으로는 국가균형특별회계가 지방이양으로 균등지역 자율계정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계정에 대해 전북 별도계정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는 추후 균등법 개정으로 별도계정이 설치되면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해진다.

다육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의 실질적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지원위원회가 운영된다. 지원위원회의 심의인건을 검토할 실무위원

회와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실무 지원도도 설치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가 1/20에서 1/30로 완화돼 주민참여 요건도 완화된다.

이번 법사위 심의단계에서도 김관영 도지사과 정운천, 한병도 안당위원장 등 법사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법사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 대기하며 실무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까지 연이은 심의통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양당간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다. 또한,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전북발전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지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7단계 계획에 도내 82곳 반영

임실 관촌 덕천리 국도 17호 구간·무주 안성면 죽천 교차로 등

전북도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2023~2027년) 기본계획’에 82곳, 2,584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기본계획은 국토부가 국도 위험노선이나 상습정체 구간의 시설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수립해 추진하는 계획이다.

이번 7단계 기본계획은 6단계 기본계획 종료에 따라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국토관리사무소와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수립했다.

이번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북도 내 사업은 총 82건, 2,584억원으로 그 동안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성 등으로 지역주민 및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구간이다.

특히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국도 17호 구간은 운전자 시야확보가 어렵고 도로경사가 급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구간으로 개선 사업성이 인정됐다.

또한 국도 19호 무주군 안성면 죽천 교차로는 대전~통영 고속도로 덕유산IC와 군도 국도 19호선이 기형적으로 교차(π자형)해 개선이 시급한 구간이었다.

이번 7단계 기본계획에 전북은 전국 대비 15.3%가 반영돼 6단계 사업과 비

교해 금액 대비 3.6%가 증액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북도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 7단계 기본계획 대응을 위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의 성공적인 성과 노후를 발휘해 치밀한 사전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중요했다.

먼저, 선제적으로 2020년부터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전북도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건의 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현지실사단의 현장 조사사업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철저한 자료와 확보된 논리로 대응했다.

또한 국토부 수요조사 시 14개 시·군, 전주·남원국도관리사무소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규사업을 발굴·제출했다.

이번 성과는 지역장차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북도 지휘부의 주도면밀한 정부설득, 실무진의 철저한 사전대비 등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도지사는 “7단계 기본계획에 82건 2,600억원 규모의 성과를 거두어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감소, 교통정체 해소 등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조기에 국가예산을 확보해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법 법사위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의 통과를 환영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전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민주 전북도당 “연내 통과 가능성 높여”

특별자치도법안은 지난 11월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안호영·정운천·한병도 국회의원 안이 병합심사 후 대안이 의결돼 지난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

일 행안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특별자치도법안 처리를 호소한 데 이어, 지난 29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김도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 등을 만나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특별자치도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이후에도

여야 법사위원들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연내 통과 필요성을 설득해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직접 법사위 현장을 지키기도 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180만 전북도민이 염원하는 특별자치도법안이 마침내 9부 능선을 넘으며 연내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이번주 내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전북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27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제7차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임사회가 열린 가운데,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시도회의 의장들이 맞손을 잡고 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지방공항 항공노선 안정화 제도 도입을”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시도회의의장협의회서 촉구

“민간항공사, 지자체 예산 지원에도 공익성은 뒷전

시외버스처럼 슬롯·노선 패키지로 함께 항공사에 배정

노선 운항 양을 경우 슬롯도 자동 회수 제도 마련 시급”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2)은 27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에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안정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간항공사와 지방공항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항공사는 공익성은 뒷전으로 한 채 오직 수익과 수익만을 쫓아 지방공항의 노선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등 기업이기주의의 전

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항의 항공노선 배정에 있어 고속·시외버스처럼 슬롯과 노선을 패키지로 함께 항공사에 배정하고 항공사가 노선을 운항하지 않을 경우 배정된 슬롯도 자동 회수되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항공노선 안정화 제도를 위한 제안을 했다.

한편 군산공항 군산제주 노선은 12월 15일 기준으로 기존 일/4회 운항에서 일/3회 운항으로 감편됐다.

/김재훈 기자

‘작년부터 내년 예산까지 3년 연속 정부 예산신장률보다 높아’

민주 윤준병 의원, 정읍 5477억·고창 1784억원 확보 견인

전년대비 각각 6.2%·7.4% 증액… “지역발전 위해 최선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023년 정읍·고창 지역 국비 예산에서 정읍 6.2%·고창 7.4%의 증가된 예산을 각각 확보해, 정부 예산신장률(5.1%)보다 높은 신장률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지역 국비예산은 정부예산 신장률보다 높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정읍·고창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2021년부터 2023년 예산까지 3년 연속 정부 예산신장률보다 높은 국비 확보 신장률을 달성해 “지역현안 해결 사로서 면모를 발휘했다.”

정읍시 2023년도 국가예산은 5,477억 원을 확보했으며, 전년 5,157억원 대비 320억원(6.2%)이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정읍시 정부예산 반영 주요 핵심 신규 사업으로는 △농축산융합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200억), △제약·농업 미래엔터 양성센터 구축(180억), △애당지구 농촌융합 이용체계제편사업(292억), △백운3지구 배수개선사업(158억), △평령2지구 배수개선사업(147억), △신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40억), △금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99억), △매죽지구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10억),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17억),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

및 전용장비 지원(29억), △2023년 한국판 뉴딜(그린 뉴딜) 지중화사업(84억), △산외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70억), △정읍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50억), △정읍시 상권 르네상스 사업(80억), △내장산 다례문화원 모로단청 보수(5억) 등 총 15건이 반영됐다.

고창군 2023년도 국가예산은 1,78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년 1,661억원 대비 123억원(7.4%)이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고창군 정부예산 반영 핵심 신규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사업(1,661억), △상하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42억), △구시포 국가어항 준설보 투기장 조성(290억), △시해안 관광도로(선설 드라이브) 조성사업(195억),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160억), △국민안심해안 100사업(시범-명사리지구)(150억), △전라북도 갯벌 식생복원 사업(고창 지정공포)(150억), △생물활성형 장애 인체육관 건립사업(140억), △수남지

구 배수개선사업(70억), △홍덕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98억), △공공 하수관로 정비사업(89억), △고수 하수관로 정비사업(131억), △고창처리구역(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58억), △해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68억), △고창형찰서 직원관사 신축사업(29억) 등 총 15건이 반영됐다.

정읍·고창 핵심 신규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대거 반영됨에 따라 정읍·고창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 종자돈이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예산 확보 과정에서 36년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초반부터 지역구인 정읍·고창 지역 신규 사업들을 함께 발굴하고 예산의 필요성 및 대응 논리를 개발했다.

또한, 세종을 오가며 핵심 사업을 직접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등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와 정당한 논리에 기재부와 각 부처 공무원들도 윤 의원에게 공감하며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이화순 정읍시장과 심덕섭 고창군수, 전북도 및 정읍시·고창군 관계 공무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군산=김관곤 기자

박용근 도의원, 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 감사패 수상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회장 노창득)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용근 의원은 27일 전라북도농업인회관에서 열린 2022년 전북도 농업경영인대의원대회에서 농업·농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및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농업 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제정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박 의원은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방안 모색에 힘써왔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